

건의문

세종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편리성은 크지만,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전기차 화재 사고는 입주민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고, 층고가 낮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걱정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단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종시 함께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1)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과 운영 시급

세종시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나 침수 등의 재난 발생 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의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는 수동적 대처로 인해 피해 규모가 커짐을 보여주었고, 예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재난 안내는 방송시설이 고작 방송 또는 경보기 정도라서 입주민이 어떤 재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재는 전기 차단이 될 가능성이 크고 방송과 경보기는 전기 없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내에 재난 발생 시 방송을 하더라도 일방향의 방송으로는 입주민이 재난정보를 인지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재난 알림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입주민에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입주민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고 또한 입주민의 재난정보를 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매우 유독한 연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전문 장비를 갖춘 A 레벨 소방관에게 화재진압을 맡기고 일반인은 화재 현장에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입주민이 골든타임 이내에 상황을 인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종시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원격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종시에 모든 시스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또는 운영에 대한 일부 비용이라고 지원해 주신다면 아파트단지에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관심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단지가 세종시의 재난 대책에 일조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차 공간 잠식과 주차 분쟁

- 입주자 간 수·발신 전화번호 노출 없는 안심 전화번호를 통해 분쟁 예방 -

공동주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가 큼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로 용도변경이나 일부 변경을 하여 충전시설을 만들면서 주차 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주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며 폭력 사고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로 주차 등 불가피한 경우 연락 수단으로 전화번호를 차량에 남기도 합니다. 차량 남긴 전화번호에는 오히려 입주민 간 분쟁 및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인 보이스피싱 등 위험에 노출되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대안이 필요합니다. 대안은 입주자 간 수·발신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심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연락하도록 하고, 부재중에도 다시 안심 전화번호로 소통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화번호 노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설치하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더라도 통신비는 세종시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 지원은 아파트단지가 재난 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세종시와 우리 아파트단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사명으로 공동주택 재난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4년 9월 6일

세종시3생활권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45호, 2022. 12. 2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주택과), 044-300-5932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용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에 한정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0. 12. 18.>

1. 단지내도로 및 보도의 보수 <개정, 2021. 4. 15.>
2. 주민복지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및 녹지공원 등) 보수
3. 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4. 공동주택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단지내도로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개정, 2021. 4. 15.>
6.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중 도시경관을 위한 외벽도색(단, 외벽도색의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8. CCTV 유지·보수 사업
9.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
10.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11.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12.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13.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14.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시설물의 보수
- 15.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개정, 2019. 7. 19.)**
16.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벽보수<신설, 2020. 12. 18.>
17.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단지내도로 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신설, 2021. 4. 15.>
18. 공동주택의 노후승강기 보수 및 교체사업 <신설, 2021. 11. 15.>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등(개정, 2019. 7. 19.)<제16호에서 이동, 2020. 12. 18.>

HOME > 뉴스 > 업계

아파트 입주민에 긴급재난알림 서비스 제공

이경옥 기자 | 승인 2023.01.27 15:09 | 댓글 0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우리관리와 아파트관리업 오이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톡은 오늘(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우리관리 본사 사옥에서 '입주민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는 양사간 협력을 통해 우리관리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긴급재난알림 ▲전자투표 ▲주차 안심전화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고자 체결됐다.

우리관리는 지앤톡과 업계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사에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독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지앤톡의 오이천사업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내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전 세대원에 재난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RS전화+앱알림+SMS메시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알리를 발송하고 알림 수신현황을 모니터링해 미수신자에게 반복적으로 알리를 발송한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전 입주민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관리 사업장에 전자투표 서비스도 도입한다.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을 위해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지는 등 전자투표 이용기회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입주민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양사는 지앤톡의 오이톡에서 제공하는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투표율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ARS를 이용한 본인인증, 개표보안시스템을 적용해 공정성과 신뢰성도 제고했다.

양사는 입주민 개인정보(휴대폰) 노출 없이 단지 내외부에서 차주간 양방향으로 연락가능한 주차안심전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차량예약, 커뮤니티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스마트한 아파트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전기차 화재 예방...감시시스템 설치비 지원"

이종일2024. 8. 29. 10:01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 발표 하병필 행정부시장 "소방장비 확충"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 제한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비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 부시장은 "지난 1일 서구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방장비 확충 △안전한 충전시설 관리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 예방 관리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 등이 포함됐다.

시는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저상 소방차, 궤도형 배연 로봇,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또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등 4736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집교육을 한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한다. 기존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 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해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점과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 건축물 화재감시시스템(열감지 카메라 등) 설치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신축 건축물 설계 시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시는 지하층 등 건물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일정 단위별 3면 방화구획, 차수판 설치, 방출량이 큰 헤드 설치, 화재감시 CCTV 설치 등의 기준을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에는 지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전기차 주차공간 설치 방법과 안전관리계획 기준을 마련한다.

대중교통 전기 모빌리티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버스, 전기택시, 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교통안전공단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과 화재 예방 홍보도 진행한다.

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하 3층까지 설치 가능한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 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완속 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 연장 등을 건의했다.

하병필 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겠다"며 "행정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